

# 인문학과 사회과학 - 학문과 교육 발전 방안

강 희 경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1. 한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위기

1997년 12월 우리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정치인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회과학을 전공한다는 학자들이었다. 국가 부도가 나는 사태에 직면하도록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사회과학자들의 문맹 때문이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세계화론, 중진 자본주의론, 유교 자본주의론, 식민지 근대화론 등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외국 이론 소개에 열을 올렸다. 분석의 적실성 여부를 떠나서 유교와 같은 것도 외국 학자의 이론을 빌려야만 되는 참담함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시 담론 등이 또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여 현실에 맹목인 상태로 학계를 압도하였다. 김동춘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생산중심적 사회에서 소비중심적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보다는 정보가, 계급보다는 차이가, 거대 담론보다는 미시 담론이, 노동운동보다는 시민 운동이 주도하게 되었으며, 학자들은 '왜 한국 사회가 문제인가'보다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나'와 '잘 사는 한국 사회에는 무엇이 주된 관심거리인가'를 묻는 데 열중하였다(김동춘, 1998,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 『경제와 사회』, 37호).

## 2. 국가는 교육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면, 인문학의 위기가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또 그럴 상황도 아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와 세계를 알아야 하고, 사회 속의 인간과 인간 속의 사회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으며(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대학도 정부의 압력에 떠밀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교수들에게서도 성찰과 반성의 기운이 퍼져 나가고 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 할 일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우리는 세계경제체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질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 위상이나 경제발전 수준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 모형의 대부분을 미국 대학에서 찾고 있지만, 미국의 대학은 미국이 세계의 최부국이자 최선발 문명국이라는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교육 기간

도 길고 1인당 교육 투자액도 많다. 거칠게 표현해서 미국 대학이 상대적으로 학부에서 교양 교육을 강조하고 대학원에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모두 미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소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망각하고 미국 대학에서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1~2학년에 교양 교육에 주력하니깐 우리도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대학원을 학부 전공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1학년부터 연구와 실험 실습을 부과하고 있다(김성복, 1998,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개혁", 『대학교육』, 제94호). 오히려 우리는 현재와 같은 교양 교육(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국어, 수학, 영어, 국사와 같은 것을 1학년에서 다시 가르치는 것)은 대폭 축소하고 학부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나라이다. 학생의 선택권은 전과 제도나 복수전공제를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하지 않고 1학년을 허송세월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유를 부릴 나라가 아니다.

국가는 교육 정책에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대학생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늘릴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정원을 늘리는 것에 어떤 국가적 목표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는 정원 증원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빼놓고는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정치인들은 교육이 사회이동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높은 출세열을 정원 증원으로 연결시켰다. 인구 비례당 대학생 비율이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에 달할 만큼 높아졌지만 미국 대학을 능가하는 교육 내용의 질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국가는 국가대로 힘에 부쳤지만 교육 투자를 정원 증원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 상당수의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현실(이제는 떨어지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이 정상인가? 입학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 내용과 졸업에는 관심이 없는 학부모와 사회의 맹목에



국가는 언제까지 기댈 것인가? 이제는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진학률을 낮추고 대학 재정의 실질적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신에 정부는 학력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대학에 가려는 초과 수요를 줄여야 한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이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제 '입시 정책'에서 '학문 정책'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 정책을 교육부를 최정점으로 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교육개혁, 특히 인문·사회계의 질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사회 부문의 개혁과 의식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인문학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학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교육과 학문 발전에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사법고시와 법학 교육을 학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법고시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 반대 의사를 천명하는 현실에서 과연 교육부만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상당수 학생들이 고

시를 준비하고 있는 황폐화된 현실에서 학문의 대상과 편제, 학문의 주체, 학문의 생산과 유통과 재생산을 운위하는 것이 현실 적합성이 있는가? 세계의 흐름을 인식하고 공동체형 인간을 기르는 문제를 논하는 교수와, 헌법과 형법 조항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만나는 한, 한국 사회와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현실은 더 코미디이다. 교육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3.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발전 방안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대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거나 낡은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개혁을 장기적 계획과 투자에 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 내용의 혁신보다는 단기적으로 전시 효과가 큰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해 추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의 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대학이 변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사회계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학문의 선진국들은 자생적인 학문 축적의 기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의 이론을 수입하여 한국의 현실을 해석하는 데 급급하였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과거와 같은 외국 이론의 수입은 더 이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회와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더 그렇다. 학문의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최갑수가 말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축적 기반을 갖춘

학문은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이 그릇이 있어야 인간·사회·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된 것도 자생적인 학문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생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유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교수에게 국내 대학은 학문의 소비처에 불과하며, '재충전'을 위해 거둬 해외로 나가야 한다(최갑수, 1999, "기초학문 중심대학과 서울대학교 구조 조정의 방향", 서울대 민교협 춘계토론회).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한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발전할 수 있다. 자기가 배출한 제자의 실력이 해외 유학과보다 못하다고 부끄럼도 없이 거침없이 말하면서 정부와 기업체의 자문에만 열심인 교수가 없도록 대학과 교수들은 교육 내용의 혁신에 성실해야 한다.

인문·사회계 학문과 교육 내용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특히 법학)의 편제를 나누는 것이 나이고, 대학의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둘이다.

#### 1)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분리 편제

이것은 앞서 말한 학문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대학 편제를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대학으로 나눈다. 전자를 대학으로 부르고, 후자를 전문대학원으로 부른다. 기초학문의 대학은 3년제로 한다. 현재 대학의 1학년 교양 교육이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 등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용학문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2~4년제 전문대학원으로 만든다(의대는 4년, 법대는 3년). 기초학문을 들어 온 학생들은 1학년부터 바로 현실과 적합한 내용으로 혁신한 전공관련 공부를 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학자가 되기 위하여 기초학문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도 있고, 응용학문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국가가 할 일이 있다. 3년간의 기초학문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호를 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학도 현실 사회의 변화와 관련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현재 기업체들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사관계와 같은 분야는 사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기업체는 경영학 전공자만으로 수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 투자의 효율성도 기하고 학문의 체계도 잡고 교육의 근간도 세우는 것이다. 기초학문 학부를 졸업한 학생만으로 전문대학원을 진학하게 하는 방식은 장점이 많다. 사회학과를 나오고 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를 보자. 산업사회학이나 노동사회학을 공부한 사회학과 학생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면 노동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법학 교육의 내용을 바꾸는 데도 적합하다. 현재는 고시 과목이 법철학이나 법사회학보다는 주로 법해석학에 치우쳐 있는데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기초학문 학부에서 배운 실제 내용(예: 환경, 여성, 노동 등)과 관련지어 철저하게 공부시키면 법학 자체의 발전도 가져오고 국민 법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미국은 16만명의 법과 대학원 학생이 졸업해 대부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정도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데 비해 우리는 7만명의 법학과(부전공 포함) 학생이 졸업하여 700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문제와, 과연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교육 연한이 늘어나는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현재의 방식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는 이번으로 족하다. 인문·사회과학의 혁신적인 교육 내용은 법학 교육과 사법고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현실 진단일 것이다.

## 2) 연구소의 독자 기관화와 기능 강화

인문·사회계의 학문 발전과 교육을 혁신하는 두번째 방안은 이 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대학 조직 체계에서 학과가 기본 단위이고 연구소는 부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측의 프로젝트 수요가 많은 이공계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명목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 연구소는 연구비가 생기면 임시로 조직을 편성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독자적인 계획 연구를 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실정으로 대학의 연구 기능이 교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연구 성과도 대학 내부에 축적되지 않았다.

인문·사회계 대학은 연구의 특성화를 위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강점이 있는 연구소에 교수 채용권과 예산 편성권, 강의 개설권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은 현행 학과 체제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학과에 배치된 교수도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학과 체제가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임에 비해 연구소 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화된 연구(주로 장기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실과 밀착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연구소 소속 교수가 독자적인 과목 개설권을 가짐으로써 여러 과의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를 교육 내용으로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문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의 위상 강화는 대학의 특성화를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연구소에 다른 대학이나 외국 대학의 교수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은 교수 인사 관리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복수 모집단위제도(또는 학부제)가 비인기 전공을 도태시키고 대학의 취업 학원화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연구소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처럼 인문·사회과학계 학생이 많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기본적으로 대학생수가 너무 많다). 그러나 일정한 수의 연구자는 필요하다. 이것을 연구소를 독립 기관화시킴으로써 해결하지는 것이다.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학문적 역량을 집결하여 연구해야 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 수요자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소 체제는 시대의 변화를 과 체제보다는 훨씬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자연과학에도 필요하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풍토를 진작하는 데 더 긴요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대학의 지역연구관련 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일본은 대학 연구소를 연구대상 지역별로 특화시켜 중점연구시설로 육성하고, 여기에 대학원 기능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설치된 대학만의 기구가 아니라 전국의 대학을 지원하는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가진 연구소와 대학이 상호 조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경도(京都)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인문학, 사회과학에 덧붙여 자연과학(농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 전임교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의 어학 교육은 大阪外語大學과 京都産業大學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6개월과 1년 단위 계약제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고 있다(이종구, "일본의 지역 전문가 양성과 지역연구 체제",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14,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현재 연구소는 단위 행정기관이 되지 못하여 법적으로 과목 개설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다. 이러한 법률적 제

한 속에서라도 각 대학은 인문·사회계 학문 발전과 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학계간 연구나 사회와 밀착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를 연구소 소속 교수로 임명하여 장기 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과와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연구소 체제를 한 대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접 대학이나 전국적인 대학을 상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경영자는 생각을 전환하여 사회를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과, 단과대학, 대학의 장벽을 건어내고 새로운 학문 발전의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복합전공과 연계전공을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문에 새겨져 있다는 '살아있는 영혼에게' 라는 글귀를 '살아있는 한국의 영혼에게' 라는 것으로 대체하여도 괜찮다면, 이제 한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수입 오퍼상에서 벗어나고, 학자는 자신이 가르칠 것을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으로 자기 사회를 분석할 수는 없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구와 교육의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문화와 정신적 삶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학문의 자기생산 구조에 눈을 돌려야 한다. **■**

#### 강희경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하였다. 공저서로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등이 있다.